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형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가온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온라인 하이텔·나우콤/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담당: 정책실장 김기식 ☎796-8364)
제 목 한의사회의 폐업 결정과 관련한 성명서
날 짜 1996. 6. 15. (총 2 쪽)

이제 정부와 한의사회, 약사회는 토론을 통한 사태의 합리적 해결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한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약사들의 전면 휴업, 양측의 집단적인 시위와 농성 등으로 이어져온 한약분쟁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마침내 한의사들의 집단적인 폐업사태를 목전에 둔 시점에 이르르게 되었다. 우리는 먼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시켜 온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최근 시험출제와 관리 상에 하자가 있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국가고시의 권위를 빌미로하여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최소한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발전적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법처리를 운운하며 사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리적 토론을 통한 사태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보다 일시적인 미봉책에 급급해 왔던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책임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약조제권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내세워 극단적 주장과 행동을 서슴지 않아 온 한의사회와 약사회측에 대해서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양측은 이 분쟁을 통해 각자가 어떠한 이득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양측 모두에 대한 국민 모두의 불신과 실망은 돌이키기 어려운 커다란 손실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한의사회의 집단적인 폐업결정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약사회측이 이번 시험결과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에 급급하여 대화와 토론을 통한 상호보완적인 의약발전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의 분쟁과정이 합리성을 결여한 채 극단적인 주의주장과 집단행동으로 일관됨에 따라 국민적 입장에서 개입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 있어서 시민단체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약분쟁은 단지 한의사와 약사 간의 이권다툼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보건 증진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 속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마냥 지켜만 볼 수만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약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고 더 나아가 정부, 한의사회, 약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 4자가 모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한의사회, 약사회 모두에 촉구한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오재식